

제2장

제·개정 법령 평가사례

201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 1 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1. 준수부담의 적정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가능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5.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7. 접근성과 공개성
8. 예측가능성
9. 이해충돌가능성

01 준수부담의 적정성

사례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무관청이 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는 법률상 근거 없어 준수부담의 적정성 저해 우려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강화시 지정제가 아닌 확인제를 도입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의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4. 법 제48조 제10항 본문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
- ⑤ 성실공익법인등은 5년 마다 재지정요청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이 성실공익법인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다.
- ⑭ 제3항 내지 제5항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황

-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운용할 목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정부의 지출만으로 복지, 교육,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익법인 역할의 중요성 증대

※ 2011년 기준 공익법인은 6개 분야에 약 5,000개 규모이고 2010년 결산서류 상 기부금수익이 있는 공익법인은 1,700개

〈유형별 공익법인 수 및 기부금수익 발생법인 수〉

구 분	계	교육	학술창작	사회복지	의료	문화	기타
법인수	4,804	1,184	1,195	1,050	661	209	340
기부금수익 발생법인수	1,700	436	584	584	121	78	165

(출처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정책동향, 한국조세연구원 2012)

- 공익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게는 증여세 면제범위 확대 등 세제혜택을 통한 공익사업수행 재원마련 인센티브 제공

※ 성실공익법인 요건 : 투명성 요건(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과 사적지배 억제(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이하) 및 공익성 유지(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

구 분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주식취득 규제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 취득까지 증여세 면제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취득까지 증여세 면제
계열기업 주식보유 규제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의 30%(50%)초과 보유시 가산세 부과	주식보유한도 비적용

문 제 점

- 동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수행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

성실공익법인 요건강화	성실공익법인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법 제48조 제3항) • 계열기업 홍보금지 (법 제48조 제10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공익법인 신고제(확인절차 없음) → 인증제(정부지정제도)로 전환 • 성실공익법인 공시사항 추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시행령 제43조의 3)

- 지정제도 도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지정(처분)을 통해 법적효과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법률사상임에도
 - 법률의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준수부담의 적정성 저해 우려

개선권고

-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강화시 지정제가 아닌 확인제를 도입하도록 변경
- 요건충족여부 확인 후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
- 확인제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충족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개선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개정)

제13조 ①~④ (생략)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요건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 ⑬ (생략)

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사례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업무가 개별사업법령 및 「시특법」에 의해 중복 시행되어 시설물운영자가 부담해야할 비용·희생 등이 가중될 우려있으므로 개별사업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관련 규정 정비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1종시설물”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소규모 취약시설물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외에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물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 15. (현행과 같음)

현 황

-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 소규모 취약시설물 : 「시특법」에서 정한 1·2종시설물 이외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물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시특법 규정 〉

법 제29조(사업)제7호 :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4조의2(소규모 안전취약시설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공단의 위탁사업으로 분류되어 시설물 안전점검에 국한된 업무를 담당

-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상 시설물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

-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개별법령에서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특법」으로 취약시설물을 지정·관리하는 규정을 마련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체계 〉

〈현 행〉 개별 사업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근거하여 실시

정기안전점검 ⇨ 수시안전점검 ⇨ 결과보고 ⇨ 개보수명령
(운영자, 반기1회) (운영자 → 안전점검기관) (운영자 → 지자체) (지자체 → 운영자)

※ 국가·지자체는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 및 개보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개 정〉 개별 사업법령 + 「시특법」에 근거하여 병행 실시

① 정기안전점검 ⇨ 수시안전점검 ⇨ 결과보고 ⇨ 개보수명령
(운영자, 반기1회) (운영자 → 안전점검기관) (운영자 → 지자체) (지자체 → 운영자)

② 대상 시설물 지정 ⇨ 안전점검실시 ⇨ 결과통보
(국토부장관) (공단) (공단→운영자·관계행정기관)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2개 부처 / 13개 법률 / 17개 시설

시설종류 (17)	세부종류(49)		관련법률 (13)	소관부처 (2)
	생활시설(27)	이용시설(22)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보건법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시설종류 (17)	세부종류(49)		관련법률 (13)	소관부처 (2)
	생활시설(27)	이용시설(22)		
성매매피해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부)자보호시설 • 모(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자)시설 • 공동생활가정 • 일시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복지관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문 제 점

-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업무가 개별사업법령 및 「시특법」에 의해 중복 시행과 그로 인해 시설물운영자가 부담해야할 비용 · 희생 등이 가중될 우려
 - 현행 「시특법」상 ‘소규모 취약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만 국한(영제24조의2)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에서 등록 · 관리되고 있는 시설로
 - 사회복지시설은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과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 규정을 두고 있어 「시특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리체계의 혼선과 시설운영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소규모 취약시설물’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함에 있어 지정방법 · 절차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물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현행 「시특법」상에서 1·2종시설물 등을 정함에 있어 대상 시설물의 범위, 지정방법·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관계행정기관의 주도적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시설물운영자의 예측이 불가능

개선권고

-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지정 범위, 지정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
- 개정안과 개별사업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 등이 중복되어 시설운영자의 관리체계에 혼선 우려로 규정 정비가 필요

개선결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3. 3. 23. 개정)

제2조 제4호 (삭제)

제7조의3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소규모 취약시설물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수·보강 등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시설물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 안전사고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재난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2 제재규정의 적정성

사례1.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정안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경사유가 불명확하므로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가.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현 황

-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세계물포럼**은 21세기 세계 물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와 전문가, 국제비정부기구 등이 모인 세계물위원회에서 제창되어 창설된 포럼으로 매 3년마다 개최되고,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최 예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

문 제 점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부과권자가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감경할 우려(과태료 가중 규정 불비)
 - 처분 대상자의 **과태료 감경을 위한 로비 등 부패 발생** 소지 내재

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시 **감경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재 규정 명확화
 - ※ 예) 감경사유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거나 가중사유를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 과태료 부과시 **감경 사유뿐만 아니라 가중 사유에 대한 구체화** 규정을 마련



개선결과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2013. 3. 18. 제정)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라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생략)

사례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재처분을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친족 외에 제3자를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제재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게 종전 영업자의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 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친족등에게 승계(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의 경우에는 1년간 승계한다)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체육시설업자*의 의무 위반·미이행**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 등록 체육시설업(골프, 스키, 자동차 경주), 신고 체육시설업(요트, 조정, 빙상, 승마, 수영, 골프연습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2종류로 구분

** 시설기준 위반, 사업계획 변경승인 의무 미이행, 안전 · 위생기준 위반, 회원 모집 · 보호에 관한 사항 위반 등이 시정명령 대상임

－ 체육시설업자가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 영업폐쇄 등 행정상 제재를 부과

•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폐지를 악용한 행정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 제재처분을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친족***을 내세워 **같은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제재처분의 효과가 친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

* 범위 : 종전의 영업자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 혈족

문 제 점

•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한 것은 **영업의 폐지(자진 폐쇄 → 개업)**를 통한 **제재처분 회피를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상 제재처분에 대응하여 미리 영업장을 폐쇄하고 소위 ‘바지사장’을 고용, 사실상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질서문란 행위를 방지하고, 법률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담보

•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대상**을 ‘**친족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제재처분 대상자가 친족이 아닌 지인 등 **제3자를 이용하여 제재를 피하고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려움**. 동 ‘친족등’ 조항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제3자를 이용한 영업재개에 면죄부로 작용**

개선권고

-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 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관광부)의 경우도 행정상 제재처분 승계의 범위를 ‘친족등’에서 ‘제3자’로 확대하여 법률 개정 추진 중(규개위 심사)

개선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3. 5. 개정진행 중)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 ④(생략)

⑤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또는 제3자(이하 “제3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위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제3자등에게 승계(등록취소, 영업폐쇄명령의 경우에는 1년간 승계한다)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제3자등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3 특혜발생가능성

사례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고도지구 지정 이후에 지구 지정 이전 소유자 및 상속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자연공원법」 등 유사법령에 비추어 특혜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조항 삭제 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30조(토지·건물 등 소유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등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계속하여 상속을 받아 소유한 자

현황

- 고도(古都) 지구 행위제한으로 사적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① 지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자 및 ② 상속자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고도지구 지정 이후에 지구 지정 이전 소유자 및 상속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매수청구 신청자 〉

「법」 제19조 제1항

1. 지구지정 전부터 계속 소유한 자
2. 지구지정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자
3. 지구 내 소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30조 〈신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로부터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부터 상속받은 자

※ 2012. 3. 5. 문화재청은 경주·부여·공주·익산 4개 고도의 894만㎡를 고도 지구로 지정 (특별보존지구 552만㎡, 보존육성지구 342만㎡)

문 제 점

- 지구지정 이후에 지구지정 이전 소유자 및 상속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자연공원법」 등 유사법령에 비추어 특혜 소지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자연공원법」 등 유사 법령에서 매수청구 신청을 ① 지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자, ② 상속자 및 ③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부터 소유한 자로 한정

개선권고

- 지구 지정 이전 소유자 및 그 상속자에게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안 제30조 제1호 삭제

개선결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 7. 26. 개정)
〈삭제〉

사례2.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대행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로만 정하는 경우 능력이 있는 대행기관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독점적으로 규정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대행기관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평가규정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위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호소수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수자원 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현황

- 지하수법*(12.1.17. 공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도서·해안지역 가뭄 취약지역 등에 지하수관리기본계획·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하며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을 마련
- 현재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인 지하수댐이 전국에 6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지하수 관리업무(수위/수질 등)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

* 국내 지하수자원확보시설(지하수댐) 설치 현황

구 분	쌍천댐	이안댐	남송댐	옥성댐	고천댐	우일댐
위 치	강원 속초	경북 상주	경북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	전북 정읍
공급능력 (㎥/일)	33,000	24,000	23,600	27,900	25,110	16,200
용 도(용수)	생 활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준공년도(년)	1998	1983	1986	1986	1986	1986
유지관리 주체	속초시	한국농어촌공사				

* 지하수 관측망 설치·운영 기관

(2009년 12월말 현재)

구분	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비고
관측망수	3,422 개소	327개소	2,060개소	153개소	882개소	
관측항목		수위/온도/ 수질	수질	수위/온도	수위/수질	
관계법령		지하수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관한 규칙	농어촌 정비법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기관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환경 공단	한국농어촌 공사	연구원· 협회 등	

문 제 점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대행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로만 정하는 경우 능력이 있는 대행기관의 참여기회를 제한

– 시설 설치의 기준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전문기관*에서도 시설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국내 6개 지하수댐 중 5개를 설치·관리하고 있고, 전국 지하수 관측망 3,422개소 중 153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조사업무의 대행 전문기관(시행령 제4조)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 또한, 시설 설치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목적과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대행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로 한정하는 것은 효율적 사업추진에 장애

개선권고

- 독점적으로 규정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대행기관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연구·시공실적, 조직 및 기술력, 시설 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행기관을 확대

개선결과

지하수법 시행령(2012. 6. 8. 일부개정)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04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사례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임대료나 연체이자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감 기준이나 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아, 경감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토록 함

● 평가규정

제25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③ (생략)

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현황

-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 체결
 -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법 제24조)



- ※ 간척지 :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척지를 매립 또는 배수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법 제2조 제2호)
- ※ 간척지 활용사업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법 제2조 제3호)
- ※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지방공기업 등(법 제11조 제1항)
- ※ 관리기관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고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법 제23조 제1항)
-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 부과
 - 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당 임대료 및 연체이자 경감 가능

문 제 점

-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임대료나 연체이자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감 기준이나 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아,
 -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게 과도한 재량 부여 및 경감 받으려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개선권고

- 경감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 17. 제정)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③ (생략)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기준에 따른다.

사례2.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학생이 퇴학할 경우 재학기간 동안 각종 학비 등의 면제 혜택을 국고에 상환해야 함에도 세부적인 판단기준 없이 교장에게 면제할 수 있는 재량 부여하고 있어, 퇴학하는 자는 수혜받은 학비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에 상환토록 의무화하고, 면제할 경우 그 세부 요건을 명시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17조(복무의무 및 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기간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졸업자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 가운데 퇴학하였거나 졸업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 중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장은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현 황

- 국악·전통학교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재료비·학습비·급식비 등의 보조금 지원 가능
 - 국악·전통예술고를 졸업한 자에 대해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에 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토록 의무 부여
 -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학 중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함

※ 퇴학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문 제 점

- 복무의무에 대한 유예·면제 관련 재량의 적정성 확보 미흡
 - 복무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 ‘정당한 사유’라는 추상적·포괄적 요건 설정으로 인하여 재량의 적용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활용될 소지
 - 학생이 퇴학할 경우 재학기간 동안 각종 학비 등의 면제 혜택을 국고에 상환해야 함에도 세부적인 판단기준 없이 교장에게 면제할 수 있는 재량 부여

개선권고

- 복무의무 유예·면제 요건의 구체화
- 퇴학하는 자는 수혜받은 학비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에 상환토록 의무화하고, 면제할 경우 세부 요건 명시

개선결과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2012. 5. 23. 제정)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사람은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0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사례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위탁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한 위탁의 범위가 아닌 데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존재하므로 관련규정 삭제 또는 구체화 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29조(위탁사업의 범위) 법제34조의2 제4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실태조사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치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문화·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황

-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법 제34조)
 - 위탁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부령 제29조 제6호에 따르면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문화·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탁 사업의 범위로 규정

문 제 점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 ※ 민간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 정부조직법 제6조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경우에는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민간위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 부령 제29조 제6호는 위탁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한 위탁의 범위가 아닌 데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존재
- 또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위탁으로 인해 예산 낭비 우려
- 위탁사업의 범위 중 제29조 제6호 규정 삭제 또는 구체화

개선권고

개선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11.5.개정)

제29조(위탁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범위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 조사로 한다.

사례2.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관 선정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마련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21조의3 (권한의 위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어도관리데이터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현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법 제19조의5)

－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부령에는 위탁계약서 작성, 추진실적 제출 등 절차적인 사항과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과 관련된 내용만 규정

문 제 점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행정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 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위탁기관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우려** 및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개선권고

-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마련

개선결과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2012. 11. 23. 개정)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수산물과학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어도 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0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사례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수단 등이 미비하므로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비 지원)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황

- 법 제10조에 따르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령으로 규정

※ 연구개발사업 :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쌀가공품의 품질향상·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문 제 점

-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미비
 -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한 기준·절차나 방법 및 사후관리 수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산출내역서를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
 -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지원받으려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우려
- ※ 지식경제부가 주도한 선도산업지원단 사업에 선정된 모 업체가 연구비 수십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중(MBN, '12.2.9)

개선권고

-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한 규정 구체화
 -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수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

개선결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5. 25. 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비 지원) ① ~ ②(생략)

-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개정안은 지원의 대상을 단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만 규정하고 있고, 지원의 구체적 내용, 지원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지원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9조(건강증진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 관련 조사·연구 및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2. 영양관리, 신체활동관리,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3. 구강건강(口腔健康)의 관리
4.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의 개인별 건강 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 황

- 국가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 경상보조사업’을 수행



-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총 사업비 46억원)

※ 법 제12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2년도 공모대상 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수행기관 수
1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900,000	1
2	모성건강지원 환경조성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80,000	1
3	인공임신중절 예방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 (광고 및 캠페인)	343,000	1
4	구강보건교육·홍보	구강보건교육·홍보자료 개발	85,000	1
5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	600,000	1
6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00,000	1
7		자살예방사업(민관협력사업)	200,000	2~3
8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480,000	1
9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정신질환 인식개선	204,000	1
10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100,000	1
11	음주폐해 예방관리	건전음주 교육·모니터링	738,000	1
12		파랑새포럼 운영·음주폐해예방의 달 행사지원	243,000	1
13		건전음주 공익광고	333,000	1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등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동조제4항)

※ 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제2조제1호)

〈 지원 대상 건강증진사업 〉

1.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2. 영양관리, 신체활동관리,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3. 구강건강(口腔健康)의 관리
4.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5. 지역사회 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문 제 점

- 개정안은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지원의 대상을 단지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만 규정하고 있고,
 - 지원의 구체적 내용, 지원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
-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법률에서 보조금의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법률상 제재가 약화될 우려

개선권고

- 지원 대상 외에 지원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법률에 명시
 - 지원의 내용을 재정지원으로 하고 그 범위를 ‘건강증진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정
- ※ 또는 대통령령(국가 지원) 또는 조례(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규정 명시



개선결과

국민건강증진법(2013. 5. 현재 개정진행 중)

제9조(건강증진사업) ①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07 접근성과 공개성

사례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특수판매업자의 부당행위 공개규정 마련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5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 황

- **법률**(제45조)은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특수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개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리 소명의 기회를 부여**

문 제 점

- 특수판매업자의 부당행위에 공개에 대한 **소명 기회**는 주고 있으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행위의 내용을 공개하는 **세부규정이 없어** 부당행위 방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공개성·접근성 차단 우려**

개선권고

- 특수판매업자의 법 위반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신설



개선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전부개정)

제5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사례2.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업무 등의 수탁기관을 공개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인들이 산림관련전문가 자격증 교부나 보수교육 등에 대한 처리기관 등을 알 수 있도록 함

●● 평가규정

제1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보수교육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치·지정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현 황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산림교육 실태조사,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 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

문 제 점

- 위탁 기관이 선정된 경우 해당 기관을 공개하여 관련 민원인들이 실태조사업무나 산림관련전문가 자격증 교부나 보수교육 등에 대한 처리기관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비공개되어 정보의 접근성이 차단되는 등 투명한 행정 저해



개선권고

• 업무 위탁 기관 등 공개

- 위탁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고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개선결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24. 제정)**제18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08 예측가능성

사례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법률에서 위임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 · 기간 ·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 하도록 규정

●● 평가규정

제44조(광고의 제한) 국토해양부장관은 텔레비전방송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시행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해당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현 황

-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하도록 규정(시행령 제44조제1항)하고 있었으나,
- 국토해양부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임

해양심층수개발법

제51조(광고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 · 기간 · 횟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먹는해양심층수 산업의 품질경쟁 촉진과 정보제공 및 먹는샘물('13.1.1.부터 텔레비전 광고 허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먹는 해양심층수도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

※ 먹는해양심층수 업체 현황(14개사)

(2012.6월 현재)

제조업체명		허가 · 등록	허가기관	제품명
합 계				14개 업체 / 20개 제품
국내 (5)	(주)워터비스	'08.04.01.	강원도	· 몸앳좋은물 · 블루마린(oem) 등 6개 제품
	(주)파나블루	'09.06.23.	경상북도	· sure · 마레1500 · 미네워트 등 4개 제품
	(주)강원심층수	'09.04.15.	강원도	· 천년동안
	(주)글로벌심층수	'10.06.22.	강원도	· 딥스
	(주)울릉심층수	2011.11.	경상북도	· 청아라
수입 (9)	메딕코리아(주)	'08.03.27.	서울시	· 무로토(일본)
	(주)트레밀라	'08.06.13.	"	· 코나딧(미국)
	(주)마할로	'08.06.30.	"	· 마할로하와이심층수(미국)
	(주)해농	'11.02.24.	"	· 가이오(일본)
	(주)인엘스	'11.09.02.	"	· 가이오(일본)
	(주)일본해양심층수	'08.05.08.	경기도	· 미에오와세해양심층수(일본)
	케이제이유통상	'08.06.30.	"	· 즈루가와먹는해양심층수(일본)
	(주)건강사랑	'08.08.19.	"	· 바다의미네랑수심층수(일본)
	(주)코나딧코리아	'10.03.25.	"	· 코나딧 0.5ℓ · 1.5ℓ (미국)

※ 먹는해양심층수 생산 및 판매 현황

(2011.8월 현재, 단위: 병/천원)

구 분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합 계	48,268,137	45,328,236	24,588,656
2008. 04.~12.	11,062,664	7,665,183	4,452,051
2009. 01.~12.	12,524,395	10,311,137	5,400,118
2010. 01.~ 12.	10,972,738	13,346,739	7,425,159
2011. 01.~07.	13,708,340	14,005,177	7,311,328

문 제 점

-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 · 기간 ·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
 - 광고를 하려는 제조업체 등의 이해관계자가 광고 제한과 관련한 행정 업무처리의 절차 · 방법, 이의신청, 세부심사기준 등이 규정되지 않아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곤란

개선권고

-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 하도록 규정
 - 광고 제한에 대한 심사절차, 이의신청, 세부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개선결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 16.전부개정)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 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2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례2.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수의계약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수의계약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 평가규정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성과가 있다고 인정된 후 2년 이
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생략)

현 황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의계약 사유를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 ② (생략)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확산
하고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28개)에서 공기업 ·
준정부기관(110개)으로 확대하려는 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 념 :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정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운영현황
 -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확산본부 설치·운영
 - 시행현황 : 일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이나 아직 제한적인 수준

* 확산본부에 등록하여 공식 추진 중인 모기업수는 28개사, 28개사의 2년간('09~'10) 성과공유 총금액은 751억원에 불과

- 지식경제부는 성과공유제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 확산추진본부가 성과공유제 시행여부 및 객관적 실적 등을 판단하도록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지경부 고시)을 제정(12.4월)

문 제 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의계약 요건으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성과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

※ 성과공유제 시행에 따른 객관적 성과인정이 어려워 동 요건에 의한 수의계약이 저조함에 따라 성과공유 확인제 도입

개선권고

- 성과공유제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 25. 개정)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생략)

09 이해충돌가능성

사례1.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개산계약에 의한 국방조달사업 납품 과정에서 원가 과다산정 등의 비리방지를 위해 국방조달사업자의 원가자료 적정성 등을 확인·관리하는 원가관리관 및 원가자료 작성·지도 등 원가관리 업무 대행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직원에 대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와 관련하여 법률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마련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8조(원가부정행위의 금지) 국방조달사업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원가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 간에 향응·금품 등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거나 제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가. 계약상대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서로 다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 나. 국방조달사업자와 전문기관의 임직원
 - 다. 국방조달사업자의 임직원과 제12조에 따른 원가관리관
5. (생략)

제12조(원가관리관의 운영) ①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산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원가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국방조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원가자료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람(이하 “원가관리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⑧ <생략>

제22조(전문기관 또는 원가관리관의 의무) 전문기관 또는 원가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원가부정행위
2. 국방조달사업자의 원가자료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국방조달사업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업무상 알게 된 국방조달사업자의 영업비밀이나 군사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제26조(벌칙) ① **제8조 제1호**에 따른 원가부정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가자료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8조 제5호**에 따른 원가부정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거래업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2조제2호를 위반하여 원가자료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가자료나 과세정보 또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③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방조달사업의 임직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황

- 국방조달사업 개산계약에 따른 납품 과정에서 원가 과다산정, 하도급 업체와의 이면계약 등 부정부패 행위가 만연

–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관리, 예산절감 및 방위사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추진

- ※ 개산계약은 국방조달사업이 완료된 뒤 원가에 일정 이윤을 붙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원가가 높아질수록 이윤 발생

➤ 원가과다계상 등 원가부정행위 사례('06~'12.7. 방위사업청 자료) ;

적발 22건, 납입고지 118,410백만원(환수 16,543백만원)

- 원가관리관은 국방조달사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방조달 사업자의 원가자료 적정성 등을 확인·관리

– 원가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국방조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생산현장 등에 출입 가능

-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조달사업자의 원가자료 작성·지도 등 원가관리 업무 대행 및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 제정안 제8조는 '국방조달사업자, 전문기관 임직원, 원가관리관 등의 원가 부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2조 제3호는 '전문기관 또는 원가관리관으로 하여금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군사기밀 누설 금지'하고 있음

문제점

- 제정안은 원가관리관 및 전문기관 임직원의 원가부정행위와 영업 비밀·군사기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 제8조 제2호 내지 제4호(금품수수 등)의 원가부정행위와 제22조 제3호(비밀누설 금지)에 따른 영업상 비밀이나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

- 이러한 원가부정행위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부족

※ 전문기관, 원가관리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을 경우,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형법 적용이 어려워 제정안의 입법취치에도 반하고, 입법목적 달성 곤란

개선권고

- 전문기관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원가관리관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수뢰죄 등) 관련하여 법률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 제정안 제8조 4호에 따른 뇌물수수 등 원가부정행위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토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 전문기관 임직원 및 원가관리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이나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엄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신설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거나, 제정안 내 벌칙 적용(준용 포함) 조항 신설

개선결과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2013. 5. 현재 제정진행 중)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감독을 하는 전문기관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및 원가관리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사례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연임차수 마련하도록 함

●● 평가규정

제14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승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승강기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이 된 사람
2.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승강기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현황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법 제16조의4제5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공무원, 위촉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시행령 제14조의5제3항)

문 제 점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불비
 -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고 있어 그 판정에 따라 사고의 책임소재가 결정되므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특정 위원은 횡수에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고, 장기 연임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가능성이 존재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 우려

개선권고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연임차수 마련

개선결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3. 2. 20.개정)

제14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 2 절

업무유형별 평가사례

1. 부담 · 환급
2. 지원 · 보상
3. 위임 · 위탁 · 대행
4. 심사 · 심의
5. 지정
6. 제재
7. 재산관리 · 처분
8. 단속 · 조사
9. 보수

01 부담 · 환급

- 업무유형 : 부담
- 평가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제20조의5(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등의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시기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기적 방문차량(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 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이하 같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제20조의1에 따른 차량등록 전 6시간
 2. 기타 등록대상 차량(주기적 방문차량 외. 이하 같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제20조의1에 따른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6시간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중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가 교육을 받고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③ 그 밖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가기준

- 접근성 · 공개성

현 황

- 축산차량 등록제 실시를 위해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등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법 제17조의3 제4항),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0조)

※ 축산차량등록제

- 구제역 등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확보, 이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 대상자 교육('12.상반기) → 등록 시행('12.8.23) → 단속('13.1월~)

- 부령(규칙 제20조의5)에 의하면,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등의 교육 시간과 교육대상자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물검역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

※ 시설출입차량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교육시간 차량등록 전 6시간)
- 기타 등록차량 :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주기적 방문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교육시간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6시간)

문 제 점

-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등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장소나 교육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이 공개되어 차량 소유자 등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 농림수산물검역본부장이 내부적으로 정하고 공개하지 않아 정보의 접근성이 차단되는 등 투명한 행정 저해

개선권고

- 교육장소나 과목 등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농림수산물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2012. 9. 7. 개정)

제20조의6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호의 경우 모두 최초 등록일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전 6시간
2. 그 밖의 등록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후 1년 내 6시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업무유형 : 부담 · 환급
- 평가대상 : 국립 국악 · 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17조(복무의무 및 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기간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졸업자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 가운데 퇴학하였거나 졸업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 중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장은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국악 · 전통학교의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재료비 · 학습비 · 급식비 등의 보조금 지원 가능
 - 국악 · 전통예술고를 졸업한 자에 대해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에 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토록 의무 부여
 -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학 중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함
- ※ 퇴학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문 제 점

- 복무의무에 대한 유예·면제 관련 재량의 적정성 확보 미흡
 - 복무의무 위반 여부 판단시 ‘정당한 사유’라는 추상적·포괄적 요건 설정으로 인하여 재량의 적용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활용될 소지
 - 학생이 퇴학할 경우 재학기간 동안 각종 학비 등의 면제 혜택을 국고에 상환해야 함에도 세부적인 판단기준 없이 교장에게 면제할 수 있는 재량 부여

개선권고

- 복무의무 유예·면제 요건의 구체화
- 퇴학하는 자는 수혜받은 학비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에 **상환토록 의무화**하고, 면제할 경우 세부 요건 명시

개선결과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2012. 5. 23. 제정)

제13조(학비보조금의 상환) ①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사람은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특정 직무에의 복무의무(제정안 § 17①) 규정은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삭제됨

- 업무유형 : 환급
- 평가대상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이미 행정기관 등에 의하여 조사 또는 단속 되었거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및 고발 한 경우
4. 신고 및 고발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5. 관계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고발 접수 또는 지도·감독·단속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② (생략)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 또는 이용한 자, **공정한 경기 운영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자원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유통

•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과 관련,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 **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미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언론, 행정기관의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타인의 영업 방해 목적의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한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제한

문 제 점

•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면서

–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잘못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량을 부여

※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환수여부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 판단에 따라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 임의적 환수 조항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포상금의 반환을 면하기 위한 로비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공직선거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등 다수의 법령이 잘못 지급되거나 신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고포상금(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의무화

개선권고

• 이미 지급된 포상금이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 포상금의 **환수를 의무화**하고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환수 통지** 및 신고자의 **반환의무 명시**



개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2012. 8. 29. 개정)

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진흥공단의 임직원, 수탁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업무유형 : 부담
- 평가대상 : 수난구호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제21조(조난선박 예인시의 실비)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동수당
2. 그 밖에 조난선박 예인관련 발생된 비용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 「수난구호법」(2012.2.22. 개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 시 민간에 소속된 선박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예인하는 경우 **피예인자(선장 또는 선주)에게 조난선박 예인에 따른 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

— 금회 개정되는 **대통령령**에서는 조난선박 예인 시 부담해야할 실비를 출동수당,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난구호법(2012.8.23. 시행)」

제21조(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 시 책임) (생략)

1.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고 예인하는 경우
2. 민간에 소속된 선박이 보수(실비의 지급은 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예인하는 경우, 이 경우 실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3.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문 제 점

- 조난선박 예인 시 피예인자가 부담해야 할 실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구체적·객관적인 기준 없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등으로 불명확하게 규정
 - 담당자가 재량규정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 판단에서 실비가 부과되는 등 운영될 소지 및 피예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해 우려

개선권고

- 피예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박 예인 실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조난선박 예인 시 부담해야 할 실비에 대해 활동비, 유류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 외의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세부사항에 대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마련

개선결과

수난구호법 시행령(2012. 8. 22. 전부개정)

제21조(조난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후단에 따른 조난선박등 예인(曳引) 시 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소모된 유류비
2. 조난 선박등의 예인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 **업무유형** : 부담
- **평가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제10조의2(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등의 폐기물부담금 면제)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란 법 제16조제3항의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및 그에 준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 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가능하고 이를 증빙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반용 플라스틱 : 출고·수입량 대비 재활용률이 80% 이상인 경우
2. 건축용 플라스틱 : 출고·수입량 대비 재활용률이 20%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재활용률을 달성한 사업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증빙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여 제1항 각 호의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당해 연도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폐기물부담금 대상 출고·수입량 중 재활용된 양을 제외한 출고·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환경부장관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 * 유리병 ·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부동액, 껌,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 등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11년에는 1,521개 업체에 약 582억 부과
- 플라스틱 제품 · 재료 · 용기 중 일반용 플라스틱은 재활용률 80% 이상, 건축용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20% 이상인 경우 폐기물부담금 면제
 -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달성한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필요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활용률 달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부담금 면제**

문 제 점

-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면제 조건인 플라스틱 재활용률 달성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불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사업자가 어떤 경우에 현장실사를 받는지 알 수 없어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불법 로비를 통한 현장실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
- ※ 건축용 플라스틱은 출고량 대비 20%를 재활용했을 경우 나머지 80%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현장실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로비 가능성 내재

개선권고

- 플라스틱 재활용률 달성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개선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 22. 개정)

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

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 연간 출고·수입량의 100분의 20

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 연간 출고·수입량의 100분의 8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재활용 방법에 따라 회수·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수입실적 및 회수·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



- 업무유형 : 부담
- 평가대상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제44조(광고의 제한) 국토해양부장관은 텔레비전방송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시행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해당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준수부담의 적정성, 예측 가능성

현황

-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하도록 규정(시행령 제44조제1항)하고 있었으나,
- 국토해양부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임

해양심층수개발법률

제51조(광고의 제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먹는해양심층수 산업의 품질경쟁 촉진과 정보제공 및 먹는샘물 ('13.1.1.부터 텔레비전 광고 허용)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먹는해양심층수도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

※ 먹는해양심층수 업체 현황(14개사)

(2012.6월 현재)

제조업체명		허가·등록	허가기관	제품명
합 계				14개 업체 / 20개 제품
국내 (5)	(주)워터비스	'08.04.01.	강원도	· 몸앳좋은물 · 블루마린(oem) 등 6개 제품
	(주)파나블루	'09.06.23.	경상북도	· sure · 마레1500 · 미네윙트 등 4개 제품
	(주)강원심층수	'09.04.15.	강원도	· 천년동안
	(주)글로벌심층수	'10.06.22.	강원도	· 딥스
	(주)울릉심층수	2011.11.	경상북도	· 청아라
수입 (9)	메틱코리아(주)	'08.03.27.	서울시	· 무로토(일본)
	(주)트레밀라	'08.06.13.	"	· 코나딕(미국)
	(주)마할로	'08.06.30.	"	· 마할로하와이심층수(미국)
	(주)해농	'11.02.24.	"	· 가이오(일본)
	(주)인엘스	'11.09.02.	"	· 가이오(일본)
	(주)일본해양심층수	'08.05.08.	경기도	· 미에오와세해양심층수(일본)
	케이제이유통상	'08.06.30.	"	· 즈루가와먹는해양심층수(일본)
	(주)건강사랑	'08.08.19.	"	· 바다의미네랑수심층수(일본)
	(주)코나딕코리아	'10.03.25.	"	· 코나딕 0.5ℓ · 1.5ℓ (미국)



※ 먹는해양심층수 생산 및 판매 현황

(2011.8월 현재, 단위: 병/천원)

구 분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합 계	48,268,137	45,328,236	24,588,656
2008. 04.~12.	11,062,664	7,665,183	4,452,051
2009. 01.~12.	12,524,395	10,311,137	5,400,118
2010. 01.~12.	10,972,738	13,346,739	7,425,159
2011. 01.~07.	13,708,340	14,005,177	7,311,328

문 제 점

-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제조업자의 준수부담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
 - 광고의 금지·제한으로 인해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희생 등을 수반하는 대상 및 범위 설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준수부담이 부적절
 - 광고를 하려는 제조업체 등의 이해관계자가 광고 제한과 관련한 행정업무처리의 절차·방법, 이의신청, 세부심사기준 등이 규정되지 않아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저해

개선권고

- 법률에서 위임한 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광고 제한 사항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
-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 하도록 규정
 - 광고 제한에 대한 심사절차, 이의신청, 세부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개선결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 16.전부개정)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2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2 지원 · 보상

- 업무유형 : 지원
- 평가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9조(건강증진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 관련 조사·연구 및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2. 영양관리, 신체활동관리,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3. 구강건강(口腔健康)의 관리
4.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의 개인별 건강 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 황

- 국가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수행

-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 하여,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총 사업비 46억원)

※ 법 제12조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2년도 공모대상 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비 (천원)	수행기관 수
1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900,000	1
2	모성건강지원 환경조성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80,000	1
3	인공임신중절 예방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 (광고 및 캠페인)	343,000	1
4	구강보건교육·홍보	구강보건교육·홍보자료 개발	85,000	1
5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문화 조성)	600,000	1
6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300,000	1
7		자살예방사업(민관협력사업)	200,000	2~3
8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	480,000	1
9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정신질환 인식개선	204,000	1
10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100,000	1
11	음주폐해 예방관리	건전음주 교육·모니터링	738,000	1
12		파랑새포럼 운영·음주폐해예방의 달 행사지원	243,000	1
13		건전음주 공익광고	333,000	1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등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제4항)

※ 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제2조제1호)

〈 지원 대상 건강증진사업 〉

1. 보건교육 및 건강 상담
2. 영양관리, 신체활동관리,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3. 구강건강(口腔健康)의 관리
4.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건강교실의 운영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문 제 점

- 개정안은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지원의 대상을 단지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만 규정하고 있고,
 - 지원의 구체적 내용, 지원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법률에서 보조금의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법률상 제재가 약화될 우려

개선권고

- 지원 대상 외에 지원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법률에 명시
 - 지원의 내용을 재정지원으로 하고 그 범위를 ‘건강증진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정

- 또는 대통령령(국가 지원) 또는 조례(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규정 명시

개선결과

국민건강증진법(2013. 5. 현재 개정진행 중)

제9조(건강증진사업) ① ~ ③ (생략)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 업무유형 : 지원
- 평가대상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제23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사업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감소, 환경오염,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관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및 제공 사업
5.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②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 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지원(법 제45조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법 제45조제2항)

- 지원의 대상이 되는 단체나 법인의 기준(시행령 제23조)
 -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관련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
 -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문 제 점

- 지원대상이 되는 낚시 관련 단체 등의 기준이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나 ‘낚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라고만 규정하고,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나 전문 인력의 인적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선정될 우려 및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개선권고

-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2012. 9. 7. 제정)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사업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낚시 대상 어종의 개발·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7.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낚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 **업무유형** : 지원
- **평가대상**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경찰청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 지원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접근성과 공개성

현황

-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교통정리**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별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를 설립하여 활동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 수('12. 5. 31.기준) : 26,556명(16개 지부, 249개 지회)

- 개정안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 등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복장·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물품의 종류와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문제점

- 개정안은 복장과 장비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는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경찰청장이 ‘지급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을 경우, 예산의 제약으로 일부 단체에 특혜 제공 가능
- 지급 관련 세부사항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들의 정보 접근이 차단되는 등 투명한 행정 저해
- 따라서, 개정안 중 위임대상인 세부사항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담당자의 재량 여지 및 관련 단체의 불법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필요

개선권고

-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에 ‘지급기준’ 문구 추가
- 복장 및 장비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경찰청장이 공개하도록 의무화

개선결과

도로교통법 시행령(2012. 9. 7. 개정)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 :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장비의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업무유형** : 보상
- **평가대상** :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소관부처** : 국방부

제5장 원가부정행위의 신고 및 보상

제19조(원가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누구든지 국방조달사업자가 원가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방위사업청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가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원가부정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원가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방법’이라 한다)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 황

- 제정안은 제19조 제3항은 “원가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방법’ 이라 한다)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

－ 원가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정안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규정없이 막연히 ‘부방법’을 준용토록 명시

- ※ 원가부정행위 신고와 보상에 비해 보호와 관련 규정 불명확
 - ▷ 제정안 5장의 제목 : 원가부정행위의 신고 및 보상



-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신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태이나, 그 적용 대상 법률을 한정적으로 열거

※ 공신법은 적용 대상법률에 따른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문 제 점

- 원가부정행위는 국민의 안전, 공정한 경쟁 등과 직접 관련이 있어 공익 침해행위 영역에 속할 수 있으나,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 시행령 상의 공익침해행위적용 대상 법률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공신법’이나 ‘부방법’ 조항을 준용토록 한 것은 모순

※ 원가부정행위 신고와 보상에 비해 보호규정이 불명확하여 방위사업 계약관련 원가부정행위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고활성화 기반 취약

개선권고

- 제정안에 ‘부방법’이나 ‘공신법’상 신고자 보호·보상규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2013. 5. 현재 제정진행 중)

제14조(보상) ① 제13조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위사업관서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원가관리관을 포함한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업무유형 : 보조
- 평가대상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25조(보조금 관리 등)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허위로 한 경우

②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 황

-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50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에 교육에 관한 업무 등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제61조제2항)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동조제3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배아생성의료기관’ 등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기관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 심의,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법 제10조)

- 법률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보조, 보조금 환수, 지원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동조제4항)

- 개정안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제25조제1항)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허위로 한 경우

- 위탁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동조제2항)

문 제 점

- 개정안의 보조금 반환 요건(제25조제1항 각 호)이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반환 요건(제33조의2제1항 각 호)과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반환토록 한 보조금법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보조금의 반환을 재량으로 규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약화될 우려

※ 특례규정 신설에 대한 뚜렷한 입법목적은 찾을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선권고

- 보조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 법률과 같은 환수 요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되, 반환 요건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
- ※ “보조금 환수” 외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예산보조, 지원 금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1. 22 전부개정)
〈해당 조문 삭제〉

- 업무유형 : 지원
- 평가대상 : 수도법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 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협회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 설립
-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상대부 등은 예산지원과 다를 바가 없으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므로 무상대부의 목적, 그에 따른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나,



-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협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특례 인정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될 우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2011.4.1제정)은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국유재산 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사용료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도록 규정

-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는 등의 특혜를 인정하면서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사후 관리수단 부재

개선권고

-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또는 대부의 목적 및 그 사용기간을 해당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낭용 방지

-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등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하위법령 규정 예시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은 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상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선결과

수도법(2013. 5. 현재 개정 진행 중)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⑤ 개정안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협회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업무유형** : 지원
- **평가대상**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제4조(연구개발사업비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황

- 법 제10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령으로 규정

※ 연구개발사업 :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쌀가공품의 품질향상·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문 제 점

•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미비

-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한 기준·절차나 방법 및 사후관리 수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산출내역서를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
-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지원받으려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우려

※ 지식경제부가 주도한 선도산업지원단 사업에 선정된 모 업체가 연구비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중(MBN, '12.2.9)

개선권고

• 연구개발사업비 지원에 대한 규정 구체화

- 연구개발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수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

개선결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5. 25. 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비 지원) ①~②(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업무유형** : 지원
- **평가대상**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제10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해양과기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 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2011.12.31. 제정) 제10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번 제정안 제10조의 규정에서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

* 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시행령 제10조)

- 1항 : 출연금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 제출해야 함

- 2항 :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하여 출연금을 지급(국토해양부)
- 3항 :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함
- 4항 : 지급된 출연금은 계획서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함
- 5항 : 집행실적은 해당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 한국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 포함) 정부출연금 등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비 고
항목	2010년	2011년	항목	2010년	2011년	
계	200,182	220,013	계	200,182	220,013	
▶ 정부출연금	87,666	105,806	▶ 인건비	38,990	43,130	
▶ 자체수입	112,516	114,207	▶ 연구사업비	135,599	143,180	
			▶ 경상운영비	14,461	14,091	
			▶ 시설비	7,675	16,138	
			▶ 차입금상환등	3,457	3,474	

문 제 점

- 출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담당자의 임의적 재량에 따라 판단·결정하여 출연금이 지원되어 출연금이 방만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음
- 출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당연히 회수하여야 함에도 반환요구 규정이 없는 등 별도의 관리·감독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 발생 소지

개선권고

- 출연금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으로 출연금 지원·사용의 투명성 확보
- 출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회수 의무화 근거규정 등 관리·감독 수단 마련으로 출연금의 사후관리 강화

개선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2012. 6. 29. 제정)

제10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 ② (생략)

③ 해양과기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연구비용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교육훈련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연구비용
4. 기술기획비, 기술도입비, 기술지도비, 개발보전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비용
5. 그 밖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해양과기원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03 위임 · 위탁 · 대행

- 업무유형 : 위탁
- 평가대상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제21조의3 (권한의 위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의 구축 · 운영을 위한 컴퓨터 ·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탁사업자가 어도관리데이터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 설비 · 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위임 · 위탁 기준의 적정성

현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법 제19조의5)

-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부령에는 위탁계약서 작성, 추진실적 제출 등 절차적인 사항과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과 관련된 내용만 규정

문 제 점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행정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 되므로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 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위탁기관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우려 및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개선권고

-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마련

개선결과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2012. 11. 23. 개정)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수산물과학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어도 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업무유형 : 위임 · 위탁
- 평가대상 :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산림청

제19조(권한 ·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보수교육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 관리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치 · 지정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 · 관리

평가기준

- 접근성 · 공개성, 예측가능성

현황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산림교육 실태조사,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 관리, 산림교육센터의 운영 · 관리 업무를 위탁

문제점

- 위탁 기관이 선정된 경우 해당 기관을 공개하여 관련 민원인들이 실태조사업무나 산림관련전문가 자격증 교부나 보수교육 등에 대한 처리기관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비공개되어 정보의 접근성이 차단되는 등 투명한 행정 저해

개선권고

- 업무 위탁 기관 등 공개
 - 위탁 기관 및 업무 범위 등을 고시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개선결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24. 제정)

제18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업무유형 : 위탁
- 평가대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산림청

제29조(위탁사업의 범위) 법제34조의2 제4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실태조사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치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문화·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가기준

-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현 황

-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법 제34조)
- 위탁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부령 제29조 제6호에 따르면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문화·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탁사업의 범위로 규정

문 제 점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 민간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정부조직법 제6조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경우에는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민간위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 부령 제29조 제6호는 위탁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법에서 정한 위탁의 범위가 아닌 데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무분별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 존재

- 또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위탁으로 인해 예산 낭비 우려



개선권고

- 위탁사업의 범위 중 제29조 제6호 규정 삭제 또는 구체화

개선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11.5.개정)

제29조(위탁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범위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로 한다.

- **업무유형** : 위탁
- **평가대상**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제15조의2(시험관리기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 국가시험관리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험관리기관의 선정, 시험관리요령, 보고사항, 그 밖에 시험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위임 · 위탁 기준의 적정성, 접근성 ·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현 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법 제37조의5)

※ 수산질병관리사 :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 포함)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법 제2조)

문 제 점

- 법 제37조의5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결과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2013. 3. 23. 개정)

제15조의2(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맡길 수 있다.

1.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인력·시설을 갖춘 국가기관
 2.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3. 수산생물의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관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업무유형 : 대행
- 평가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제71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황

- 환경영향평가사의 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 등의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대행기관 지정 과정에서 과도한 재량에 따른 불법 로비 등 부패 발생 우려

개선권고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 등의 대행기관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개선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2. 7. 20. 전부개정)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04 심사 · 심의

- 업무유형 : 심사 · 심의
- 평가대상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 소관부처 : 경찰청

제8조의5(재범우려자정보관리위원회) ① 재범 우려자 해당 결정, 변경 및 해지, 그 밖에 재범 우려자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재범우려자정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공무원
2. 변호사
3. 의사
4. 교정 · 보호관찰직 공무원
5. 범죄 및 인권 관련분야 교수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

④ 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경찰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1. 재범 우려자 해당 결정, 변경 및 해지
2.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 기간의 연장

⑥ 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범 우려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행형성적(行刑成績)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개정법률안 제8조의5 제1항은 **재범우려자 해당 결정, 변경 및 해지**, 그 밖에 **재범 우려자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범우려자 정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규정 신설

※ 임기 및 구성 : 임기 2년으로 위원장 포함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재범우려자	
요 건	1.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2.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된 자
결 정	성격, 상습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범우려자 정보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찰서장이 결정 →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

- 경찰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범우려자 해당여부 등을 **결정**하고, 범죄행위 예방과 수사자료 활용을 위해 재범우려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 적응**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 보관**

※ 정보수집 범위 : ① 주소지 거주 여부 및 실제 거주지 ② 가족 상황 ③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④ 교우관계 ⑤ 기타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성 등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

-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재범우려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실시** 및 관계기관에 **행형성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법률안 제8조의5 제1항을 근거로 같은 조 제5항은 **위원회 심의 사안**을 재범우려자 해당 결정, 변경 및 해지와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 “~그 밖에 **재범 우려자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 →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 기간의 연장**”

- 위원회는 재범 우려자 해당 결정, 변경 및 해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처분청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문 제 점

-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소지
 - 장기 연임으로 심의대상자와의 유착가능성이 존재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거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미흡
 - 위원회 위원과 해당 안건 당사자인 재범우려자와의 특수관계 및 지연, 학연, 혈연 등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의 곤란
- ※ 특수관계 : 과거 피고인(現, 재범우려 대상자) – 법정대리인(現, 위원) 간의 관계 등
-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안을 심의·의결 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실효적인 수단 미약
 - 위원회는 정보수집 방법, 자료보관 기간 결정과 재범우려자 해당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요사항 전반에 대해 심의하여야 하나 제8조의5 제5항은 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경찰서장이** 해당사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 부여
 - 심의·의결 기구인 위원회 특성상 **경찰서장이** 수사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심의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필요

개선권고

- 위원회 연임 횟수 제한 규정 신설
-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 명시
- 위원회 심의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
- 경찰서장이 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른 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 의무화

개선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5(재범우려자정보관리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서가 소속된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경찰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1. 재범 우려자 해당 결정, 변경 및 해지

2.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 기간의 연장

3. 그 밖에 재범 우려자에 관한 중요사항

⑥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와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범 우려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에 행형성적(行刑成績)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 소관부처에서 권고안 수용하였으나, 법제처에서 관계부처 미협의 이유로 반려한 안건임

- 업무유형 : 심사·심의
- 평가대상 :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13조(입학전형) ① 국악·전통학교의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방법, 절차, 시기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 교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가능성

현황

- 국립 국악·전통예술중고교 학교운영의 효율성과 특성화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 이관과 동시에 국악·전통예술학교의 독자적인 입학전형 실시 등 핵심 권한을 교장에게 부여하여 유능한 국악전통예술분야 인재 발굴 도모

※ 이관대상(4개 학교)

내 용	학교명	학 과	학생수
고등학교	국립 국악고등학교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정가, 판소리, 민요, 무용	450명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	무용, 성악, 기악, 음악, 연극, 창작연희, 연희극	535명
중학부	국립 국악학교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정가, 판소리, 민요, 무용	316명
	국립 전통예술학교	한국음악, 한국무용, 음악연극	176명

〈 주요 변경사항 〉

내 용	기 존	변 경
학교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관리 · 감독	문화체육관광부 관리 · 감독
교장, 행정직원 임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무원 정원 · 직제	교육과학기술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입학 전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	국악 · 전통예술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 입학전형
입학 전형권자	시 · 도 교육감	교장
영재 교육	미 실시 (영재교육진흥법령 준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후 실시 가능

문 제 점

- 기존 교육감이 담당했던 입학전형권을 해당 학교 교장에게 일임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학생선발의 특례를 부여**코자 하나,
 - 지원 자격 및 방법, 성적산출 및 평가 등 학생선발 방법 등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저해
- ※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맡고 있는 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교, 과학고 등은 매년 다음연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중에게 공고하고 있음
- 특히 예술계 학교의 입시 관련 편법 입학 등 비리행위가 다수 발생 하는 점을 고려, 자의적 학사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필요**

〈 관련사례 〉

- 서울국악예고(現 국립 전통예술고) 교장이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합격권이 아닌 학생 3명의 점수를 뒤바꿔 합격시키고 원본채점표를 폐기하는 등 입시 비리 (MBC뉴스, '08.2.26)
-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동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평가 등에 직접 참여하는 등 부정입시 의혹 (문광위 국정감사, '09.10.6)

개선권고

- 국악·전통예술학교 입시와 관련한 지원자격 및 방법, 학생선발방법, 전형일정 등이 담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방안 명시

개선결과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2012. 5. 23. 제정)

제9조(입학전형) ①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교장이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이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의 구분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학전형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악고등학교 및 전통예술고등학교의 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 **업무유형** : 심사 · 심의
- **평가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 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각각 2명씩 위촉한다.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시 3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3배수의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이사장에게 추천토록 규정
 -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고,
 -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되,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2명,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 2명을 위촉



- 개정안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

문 제 점

- 상임이사추천위원회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
 - 사전에 설정된 제도적 장치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운영토록 하는 관련 법령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음
- ※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관의 기재사항이자 경영공시 대상인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법 제11조 및 제16조)
-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이 후보자 추천 대상자와 학연, 혈연, 근무관계 등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가 곤란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미흡

〈 공공기관 인사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

-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인사를 법령, 정관, 자체규정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관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 구성방법, 추천절차, 후보자 심사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 임원 선임절차 및 인사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유 발생일 14일 이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시스템)에 수시공시

개선권고

- 개정안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
- ※ “상임이사”는 “임원”의 일부라는 점에서,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준하여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개선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전부개정)

제8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의 비상임이사 2명
2. 공단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2명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방법,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또는 내규(內規)로 정한다.



- 업무유형 : 심사·심의
- 평가대상 : 수도법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4.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현황

- 환경부장관 등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취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및 수도사업 인가취소 시에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

※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 등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제22조)

문제점

-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와 같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 이번 개정안에 신설되는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물질약투자대행업의 등록취소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당사자 등의 지정취소 과정의 접근성·절차적 투명성 저해 우려

- ※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중해 절차상의 위법으로 취소(2012구합11676)

개선권고

- 위생안전기준에 대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물절약투자대행업의 등록취소의 경우도 청문규정을 두어 절차적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개선결과

수도법 (2013. 5. 현재 개정진행 중)

제79조(청문)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종의 취소
2. 제14조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투자대행업의 등록취소
4.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5.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6. 제63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의 취소

- 업무유형 : 심사·심의
- 평가대상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제14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승강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승강기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이 된 사람
2.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승강기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법 제16조의4제5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 1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시행령 제14조의5제1항)
 - 당연직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공무원, 위촉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시행령 제14조의5제3항)

문 제 점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불비
 -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고 있어 그 판정에 따라 사고의 책임소재가 결정되므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특정 위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고, 장기 연임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가능성이 존재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 우려

개선권고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연임차수 마련

개선결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3. 2. 20.개정)

제14조의5(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업무유형 : 심사·심의
- 평가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제26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한다.

1.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취업,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자립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아동복지법」(법률 제11002호, 2011.8.4. 공포, 시행 2012.8.5)은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제41조 제2항)
 - 이 같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규모, 위원의 자격, 심의 또는 협의 사항 등을 규정

문 제 점

- 시행령(안) 제26조에 회의의 의사·의결 정족수 등 **협의회 운영에 대한 주요규정이 없어, 협의회 운영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

개선권고

- 회의의 소집, 회의의 의사·의결 정족수 등 **협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선결과

아동복지법 시행령(2012. 8. 3. 전부개정)

제40조(협회의의 운영) ① 협회의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평가대상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도에 지방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금액 및 시기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5.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조정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지역개발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략

- ④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

현 황

-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지역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계획 승인, 기반 시설 설치 등에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금액 및 시기 등을 심의
 - 민간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제정하고 있으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이 없음

■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의 업무 내용(제43조)

〈중앙조정위원회〉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지역개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금액 및 시기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지역개발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조정위원회〉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지역개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금액 및 시기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 제 점

- 민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이 지역개발사업계획 승인, 국가 재정지원 대상·금액·시기 등의 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학·혈연,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 필요

개선권고

- 공무원이 아닌 민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의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 적용 마련

개선결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현재 제정진행 중)
제7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05 지정

- 업무유형 : 지정
- 평가대상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6.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개발 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민간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규정
 - 마리나항만시설에 주택·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 개정안의 취지는 정부의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및 투자가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총 45개소*)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에 포함되도록 개정안 마련

※ 전국 마리나항만 개발·조성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서해권	남해권	동해권	비 고
계	45	17	19	9	
既개발	15	4	8	3	
개발중	3	1	2	—	
계획중	27	12	9	6	

※ 연도별 부동산투자회사 인가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리츠 수	4	8	10	11	14	18	20	35	51	64
신규	4	4	2	2	4	6	5	18	17	13
청산	—	—	—	1	1	2	3	3	1	—
자산규모(조)	0.5	1.1	1.4	1.9	3.1	5.1	5.9	7.1	7.9	7.4

기업구조조정리츠	위탁리츠	자기관리	개발전문		계
			위탁	자기	
32	12	5	4	11	64

문 제 점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격요건 등이 규정되지 않아** 개발권을 획득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불법로비 등 부패발생 우려**
 - 사업구역 토지 면적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등 **기존 민간투자자와의 자격요건을 비교할 때 구체적인 요건이 없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음

〈 기존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시행령 제10조제2항) 〉

- ①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 이상인 자
- ②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 ④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개선권고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개발사업 시행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 투자실적 및 시행 경험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마련**



개선결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0. 8. 개정)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 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회사
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업무유형 : 지정**
- **평가대상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만화 관련 교육 또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2. 만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3. 만화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직업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또는 직업교육훈련 실적과 계획
2. 교과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의 편성과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또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 ⑤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

※ 만화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관련 연구기관 등을 지정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 강사료 및 수당, 교재 및 실습 기자재비, 현장실습 비용 등
-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 ※ 관련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진에 관한 사항,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

문 제 점

- 제정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시의 제출 서류만을 규정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 콘텐츠 및 실적, 인적·물적 기준(인력 및 시설·설비 보유 기준)등 신청 건의 심사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 미비
- 구체적 지정기준 미비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신청자의 불법적 로비 등 **부패 유발의 개연성**을 내포

개선권고

- 제출서류의 항목별 **심사기준을 마련·공개토록 개선**

개선결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3. 제정)

제4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업무유형 : 지정
- 평가대상 :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위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호소수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수자원 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 지하수법*(12.1.17.공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도서·해안지역과 같은 가뭄 취약지역 등에 지하수관리기본계획·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하며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을 마련
- 현재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인 지하수댐이 전국에 6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지하수 관리업무(수위/수질 등)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음

* 국내 지하수자원확보시설(지하수댐) 설치 현황

구 분	쌍천댐	이안댐	남송댐	옥성댐	고천댐	우일댐
위 치	강원 속초	경북 상주	경북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	전북 정읍
공급능력(㎥/일)	33,000	24,000	23,600	27,900	25,110	16,200
용 도(용수)	생 활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준공년도(년)	1998	1983	1986	1986	1986	1986
유지관리 주체	속초시	한국농어촌공사				

** 지하수 관측망 설치·운영 기관

(2009년 12월말 현재)

구분	계	국토해양부	환 경 부	농림수산 식품부	지 자 체	비 고
관측 망수	3,422 개소	327개소	2,060개소	153개소	882개소	
관측 항목		수위/온도/ 수질	수질	수위/온도	수위/수질	
관계 법령		지하수법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농어촌정 비법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기관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 촌공사	연구원·협 회 등	

문 제 점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대행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로만 정하는 경우 능력이 있는 기관의 참여기회를 제한

– 시설 설치의 기준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전문기관*에서도 시설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국내 6개 지하수댐 중 5개를 설치·관리하고 있고, 전국 지하수 관측망 3,422개소 중 153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조사업무의 대행 전문기관(시행령 제4조)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 또한, 시설 설치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목적과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대행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로 한정하는 것은 효율적 사업추진에 장애

개선권고

- 독점적으로 규정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대행기관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연구·시공실적, 조직 및 기술력, 시설 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행기관을 확대

개선결과

지하수법 시행령(2012. 6. 8. 일부개정)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업무유형 : 지정**
- **평가대상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산림청**

제28조(산림탄소등록부 운영) ① 산림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에 관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명의로 된 특정번호로 식별할 수 있는 거래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등록부에 기재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인증 받은 크레딧에 대한 이중계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크레딧의 발행, 이전 및 취소를 기록하는 독립적 거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크레딧 발행, 이전 및 취소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독립적 거래기록을 통하여 등록부상의 각 거래를 자동 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자동점검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거래계정 등록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거래계정 등록자는 그 부정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문제의 거래 또는 관련 크레딧에 관한 거래를 등록할 수 없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황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림부문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확충된 탄소흡수량을 사용하는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운영하도록 법 신설

- ※ 탄소흡수원 :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임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 ※ 산림탄소흡수량 :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저감한 탄소량

※ 산림탄소상쇄제도 : 산림조성, 산림경영, 산림전용 방지, 목질바이오매스 이용으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탄소상쇄(carbon offset)란 기업이나 단체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배출량을 외부 감축실적으로 상쇄하는 것

-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 (법 제24조)

〈 산림탄소등록부 개요 〉

(기본개념)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통계와 연계하여 탄소흡수량 총괄 정보 체계로 운영하며, 국가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
(등록정보) 공공·민간 산림탄소상쇄 활동, 크레딧 발급 및 거래, 탄소흡수량 등 (운영체계) 사업 등록 →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정보 등록 → 검증정보 등록 → 크레딧 발급 및 거래 정보 등록 →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

- 산림청장의 인증을 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이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산림탄소등록부에 거래계정을 등록하고 일정비율의 등록비 납부
- 산림청장은 크레딧(감축실적)의 발행, 이전 및 취소를 기록하는 독립적 거래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관리자는 등록 부상 각 거래의 부정행위 여부 점검할 필요

※ 크레딧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시행령 제25조)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 사업자가 거래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신규조림등의 사업이나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 사업 등(시행령 제29조)

문 제 점

- 제정안은 크레딧에 대한 이중계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정된 관리자는 크레딧 발행, 이전 및 취소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거래에 대해 자동 점검을 하여야 하는 등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관리자를 지정한다는 명시적 규정만 있을 뿐, **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자의 지정이 자의적으로 처리될 여지 및 지정 받으려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패 발생 우려

개선권고

- 관리자 지정 기준이나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22. 제정)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생 략)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있는 등록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에 필요한 보안정책,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절차 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업무유형 : 지정
- 평가대상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산림청

제6조(탄소흡수량 선도기술 육성 신청)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선도 기술로 육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탄소흡수량 선도기술 육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육성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 모델의 개발 및 확산’, ‘거래 가격의 분석 및 거래소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법 제33조)
-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육성 대상 산업은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선도사업이어야 하며, 산림청장은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 가능(시행령 제41조)
-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선도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 부령 제6조는 선도기술로 육성 받으려는 자의 서류 제출관련 내용과 육성 대상 여부 통지와 관련된 사항만 규정

문 제 점

-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될 필요
 - 특히,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절차 마련 필요
- 제정안은 서류 제출관련 등 형식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선도사업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우려** 및 지원 받으려는 기관의 **예측가능성 저하**로 인한 불법 로비 등 부패 발생 우려

개선권고

- 선도사업의 선정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2. 22. 제정)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06 제재

- 업무유형 : 제재
- 평가대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6조 제1항제1호			
1) 처리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2)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300	500
나 ~ 더.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기준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법률 제66조)
- 과태료는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2차, 3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금액 가중
-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문 제 점

-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과권자가 감경 사유를 자의적으로 정할 우려
 - 처분대상자가 과태료를 감경받기 위해 로비 등 부패 발생 소지

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시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4. 개정)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생 략〉

- **업무유형 : 제재**
- **평가대상 : 고등교육법 개정안**
- **소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시정·변경명령이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정부재정지원금 감액,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정·변경명령 없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부당이득을 얻거나 불이익을 피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해 선의의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여도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없는 경우
3.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가능성

현 황

- 학교의 장 등이 교육 관련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정부지원금 감액 등의 제재조치 부과

-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령 제71조의2 별표4)에 따라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교육과학기술부 행정처분위원회 운영 규정)를 거쳐 부과

〈 최근 5년간 제재대학 현황 〉

연도	'07	'08	'09	'10	'11
제재대학 수	대 학 34, 전문대 19, 대학원 7	대 학 21, 전문대 8, 대학원 1	대 학 7, 전문대학 6, 대학원 2	대 학 12, 전문대 6, 대학원 1	대 학 23, 전문대 6, 대학원 5
총 계	60개교	30개교	15개교	19개교	34개교

- 개정안은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부당이득 편취, 선의의 제3자 피해 유발, 고의 또는 중과실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절차 없이 상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60조 30항)

문 제 점

- 법 제60조 제2항의 조치는 제재적·침익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 처분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
- 신설 3항은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제3항 전단(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 및 제3호(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는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우려되고 그에 따른 대상 학교 로비 등 부패유발 가능성 내재
 - 각 호의 위반행위 요건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처분내용도 불확실하여 제재대상(대학)의 입장에서 위반행위별 행정 처분의 강도에 대한 예측이 곤란

개선권고

- 법 제60조 제3항 전단과 제3호를 삭제

– 시정·변경 명령 없이 조치할 수 있는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제재)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3항 각 호에 규정

개선결과

고등교육법 (2013. 5. 현재 개정 진행 중)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또는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업무유형 : 제재
- 평가대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5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현 황

- 법률(제45조)은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특수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개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리 소명의 기회를 부여

문 제 점

- 특수판매업자의 부당행위 공개에 대한 소명 기회는 주고 있으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행위의 내용을 공개하는 세부규정이 없어 부당행위 방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접근성 차단 우려

개선권고

- 특수판매업자의 범위반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신설

개선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전부개정)

제5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소명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업무유형 : 제재
- 평가대상 : 사도법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 또는 해당 사도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지 또는 해당 사도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현황

- 사도개설자 또는 해당 사도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취소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배제
 - 기반시설인 도로의 공익적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배제하고 기존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회적 갈등(민원) 및 비용 초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청문절차 없이 허가권자 직권으로 취소
 - 사도개설 허가 취소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중요한 행정처분임에도 청문제도를 두지 않을 경우, 민사·행정소송 등 분쟁발생으로 행정적·경제적 비용초래
- ※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8.10.9. 선고2008두4008판결)

개선권고

- 사도개설자 또는 해당 사도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취소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
 - 사도개설 허가 취소로 인한 일반인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비용 예방



개선결과

사도법 (2012. 12. 18. 개정)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업무유형 : 제재
- 평가대상 :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가.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 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간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물관리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물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인식을 제고하며, 수자원 및 물 관리의 개선과 물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세계물포럼은 21세기 세계 물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와 전문가, 국제비정부기구 등이 모인 세계물위원회에서 제창되어 창설된 포럼으로 매 3년마다 개최되고,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최 예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

문제점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부과권자가 과태료 금액을 자의적으로 감경할 우려(과태료 가중 규정 불비)
- 처분 대상자의 과태료 감경을 위한 로비 등 부패 발생 소지 내재

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시 감경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재 규정 명확화
- ※ 예) 감경사유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거나 가중사유를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 과태료 부과시 감경 사유뿐만 아니라 가중 사유에 대한 구체화 규정을 마련

개선결과

2015 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2013. 3. 18. 제정)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라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생략)



- 업무유형 : 제재
- 평가대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무총리실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 허위,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공신력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⑤ 생략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현황

-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은 대규모 온실가스배출업체(이하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목표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환경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검증업무의 공신력 및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

문제점

- 지정취소와 같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 부재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 공청회, 의견진술을 실시하도록 규정

개선권고

- 지정 취소 시에는 처분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규정 신설

개선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2. 12. 27. 개정)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제3호의 경우에는 고의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검증결과의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③~④ 생략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업무유형 : 제재**
- **평가대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게 종전 영업자의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친족등에게 승계(등록취소, 영업폐쇄명령의 경우에는 1년간 승계한다)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체육시설업자*의 의무 위반·미이행**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 등록 체육시설업(골프, 스키, 자동차 경주), 신고 체육시설업(요트, 조정, 빙상, 승마, 수영, 골프연습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2종류로 구분

** 시설기준 위반, 사업계획 변경승인 의무 미이행, 안전·위생기준 위반, 회원 모집·보호에 관한 사항 위반 등이 시정명령 대상임

- 체육시설업자가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 영업폐쇄 등 행정상 제재를 부과
-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폐지를 악용한 행정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 제재처분을 받은 체육시설업자가营业을 폐지한 후 친족*을 내세워 같은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제재처분의 효과가 친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

* 범위 : 종전의 영업자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 혈족

문 제 점

-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규정한 것은 **영업의 폐지**(자진 폐쇄 → 개업)를 통한 제재처분 회피를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상 제재처분에 대응하여 미리 영업장을 폐쇄하고 소위 ‘바지사장’을 고용, 사실상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질서문란 행위를 방지하고, 법률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담보

-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대상을 ‘친족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제재처분 대상자가 친족이 아닌 지인 등 제3자를 이용하여 제재를 피하고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려움. 동 ‘친족등’ 조항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제3자를 이용한 영업재개에 면죄부로 작용



개선권고

-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 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관광부)의 경우도 행정상 제재처분 승계의 범위를 ‘친족등’에서 ‘제3자’로 확대하여 법률 개정 추진 중(규개위 심사)

개선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3.5월 현재 개정 진행 중)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 ④(생략)

⑤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또는 제3자(이하 “제3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제3자등에게 승계(등록취소, 영업폐쇄명령의 경우에는 1년간 승계한다)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제3자등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유형 : 제재**
- **평가대상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제26조(산림탄소센터의 운영 및 평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업무 정지 및 지정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법 제23조에 따르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녹색사업단 산하에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고 규정

－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 가능

※ 산림탄소상쇄 : 산림조성, 산림경영, 산림전용 방지, 목질바이오매스 이용으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시행령 제26조 제정안에 따르면 산림탄소센터의 업무 정지 및 지정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문 제 점

- 민법 제43조부터 제48조 재단법인과 관련된 규정은 ‘재단법인의 정관, 증여나 유증에 관한 내용’이고, 제77조는 법인의 해산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업무 정지나 지정의 취소와는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업무 정지 및 지정의 취소와 관련된 민법의 준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에 있어 **다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분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많음**

개선권고

- 지정취소나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개선

개선결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2. 22. 제정)

제20조(산림탄소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3

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림탄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업무정지의 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한 경우	법 제23조제3항	업무 정지 5일	업무 정지 10일	업무 정지 15일

07 재산관리 · 처분

- 업무유형 : 대부
- 평가대상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제25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③ (생략)

④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황

-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 체결
 - －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법 제 24조)

- ※ 간척지 :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척지를 매립 또는 배수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법 제2조 제2호)
- ※ 간척지 활용사업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법 제2조 제3호)
- ※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지방공기업 등(법제11조 제1항)
- ※ 관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고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 가능(법제23조 제1항)
-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 부과
 - 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당 임대료 및 연체이자 경감 가능

문 제 점

-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임대료나 연체이자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감 기준이나 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아,
 -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게 과도한 재량 부여 및 경감 받으려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개선권고

- 경감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 17. 제정)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① ~ ③ (생략)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경작목적으로 임대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에 30퍼센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율 산정 및 임대료·연체이자의 감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기준에 따른다.

- **업무유형 : 계약**
- **평가대상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재청**

제30조(토지·건물 등 소유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등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계속하여 상속을 받아 소유자한 자

평가기준

- 특혜발생가능성

현 황

- 고도(古都) 지구 행위제한으로 사적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① 지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자 및 ② 상속자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고도지구 지정 이후에 지구 지정 이전 소유자 및 상속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 매수청구 신청자 〉

「법」 제19조 제1항

1. 지구지정 전부터 계속 소유한 자
2. 지구지정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자
3. 지구 내 소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30조 〈신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로부터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부터 상속받은 자



※ 2012. 3. 5. 문화재청은 경주·부여·공주·익산 4개 고도의 894만㎡를 고도 지구로 지정 (특별보존지구 552만㎡, 보존육성지구 342만㎡)

문 제 점

- 지구지정 이후에 지구지정 이전 소유자 및 상속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자연공원법」등 유사법령에 비추어 **특혜 소지**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자연공원법」 등 유사 법령에서 매수청구 신청을 ① 지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자, ② 상속자 및 ③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부터 소유한 자로 한정

개선권고

- 지구 지정 이전 소유자 및 그 상속자에게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안 제30조 제1호 삭제

개선결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 7. 26. 개정)
(해당 조문 삭제처리)

- **업무유형 : 재산처분**
- **평가대상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제67조의11(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처분에 따른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산정한다.

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등 추정총액
2. 감정평가법인 또는 **전문가격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으로 하며, 유사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현 황

- 특허권·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국유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규정이 신설된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이 공포('12.12월)됨에 따라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대부의 방법, 사용대가 산정기준 및 지식재산 처분가격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

〈 국유지식재산 〉

- 개 념 : 국가소유로 된 특허권,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권리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생략)

○ 특 징

- 비배제성 : 특정 점유자에 의한 배타적 활용이 아닌 공유와 응용을 통해 가치 재생산 및 확대
- 확장성 : 가공 또는 변형된 형태로 추가 비용없이 재생산 및 확대 가능 (영화 : 극장 → 케이블 → 인터넷방송 등으로 확장)
- 권리의 이중성 : 무한복제 가능과 침해에 대한 범죄의식 결여로 권리의 침해는 용이하나, 보호를 위한 집행은 곤란

○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산업재산권	상표권	287	-
	특허권	11,274	3,439
	실용신안권	2	-
저작권	저작권	4,863	-
	software	408,610	8,512
계		425,036	11,951

문 제 점

- 지식재산 처분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법인 외에 전문가격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우선적인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임의적으로 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기관에 의한 가격 산정 등 예정가격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개선권고

- 전문가격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우선 산정기준이 아닌 보완적 산정 기준으로 변경
- 시장에서 검증된 유사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을 예정가격 산정의 우선 기준으로 변경
- 전문기관을 총괄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하여 평가기관 선정의 공정성 제고 절차 마련

개선결과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4. 5. 개정)

제42조의2(지식재산의 처분에 관한 예정가격)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지식재산 존속기간 중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추정 총액
2.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중자산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업무유형 : 계약
- 평가대상 :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소관부처 : 국방부

제8조(원가부정행위의 금지) 국방조달사업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원가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 간에 항응·금품 등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거나 제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가. 계약상대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서로 다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나. 국방조달사업자와 전문기관의 임직원

다. 국방조달사업자의 임직원과 제12조에 따른 원가관리관

5. (생략)

제12조(원가관리관의 운영) ① 방위사업청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산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원가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국방조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원가자료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람(이하 “원가관리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⑧ 〈생략〉

제22조(전문기관 또는 원가관리관의 의무) 전문기관 또는 원가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원가부정행위

2. 국방조달사업자의 원가자료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국방조달사업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업무상 알게 된 국방조달사업자의 영업비밀이나 군사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제26조(벌칙) ① 제8조 제1호에 따른 원가부정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가자료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8조 제5호에 따른 원가부정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거래업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2조제2호를 위반하여 원가자료를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가자료나 과세정보 또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 ③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방조달사업의 임직원으로 취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국방조달사업 개산계약에 따른 납품 과정에서 원가 과다산정, 하도급 업체와의 이면계약 등 부정부패 행위가 만연

－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관리, 예산절감 및 방위사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추진

- ※ 개산계약은 국방조달사업이 완료된 뒤 원가에 일정 이윤을 붙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원가가 높아질수록 이윤 발생

➢ 원가과다계상 등 원가부정행위 사례('06~'12.7. 방위사업청 자료) ;

적발 22건, 납입고지 118,410백만원(환수 16,543백만원)



- 원가관리관은 국방조달사업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방조달사업자의 원가자료 적정성 등을 확인·관리
 - 원가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국방조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생산현장 등에 출입 가능
-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조달사업자의 원가자료 작성·지도 등 원가관리업무 대행 및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 제정안 제8조는 ‘국방조달사업자, 전문기관 임직원, 원가관리관 등의 원가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2조 제3호는 ‘전문기관 또는 원가관리관으로 하여금 업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군사기밀 누설 금지’하고 있음

문 제 점

- 제정안은 원가관리관 및 전문기관 임직원의 원가부정행위와 영업비밀·군사기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 제8조 제2호 내지 제4호(금품수수 등)의 원가부정행위와 제22조 제3호(비밀누설 금지)에 따른 영업상 비밀이나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
- 이러한 원가부정행위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부족
- ※ 전문기관, 원가관리관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지 않을 경우,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형법 적용이 어려워 제정안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입법목적 달성 곤란

개선권고

- 전문기관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원가관리관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수뢰죄 등) 관련하여 법률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신설
 - 제정안 제8조 4호에 따른 뇌물수수 등 원가부정행위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토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 전문기관 임직원 및 원가관리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이나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엄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신설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거나, 제정안 내 벌칙 적용(준용 포함) 조항 신설

개선결과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2013. 5. 제정 진행 중)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감독을 하는 전문기관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및 원가관리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업무유형 : 계약
- 평가대상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성과가 있다고 인정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생략)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위임·위탁의 적정성

현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의계약 사유를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28개)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110개)으로 확대하려는 것

〈 성과공유제 〉

- 개념 :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운영현황
 -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조사·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확산본부 설치·운영
 - 시행현황 : 일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이나 아직 제한적인 수준
 - * 확산본부에 등록하여 공식 추진 중인 모기업수는 28개사, 28개사의 2년간(’09~’10) 성과공유 총금액은 751억원에 불과

- 지식경제부는 성과공유제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성과공유 확인제」를 도입, 확산추진본부가 성과공유제 시행여부 및 객관적 실적 등을 판단하도록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지경부 고시)을 제정('12.4월)

문 제 점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의계약 요건으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성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

※ 성과공유제 시행에 따른 객관적 성과인정이 어려워 동 요건에 의한 수의계약이 저조함에 따라 성과공유 확인제 도입

- 성과공유 확인제는 성과공유제에 따른 실적 및 수의계약 요건을 확인하는 등 기업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업무이나,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어 위임·위탁의 법적근거 미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나 부령에서 설치근거에 관한 규정 미비

개선권고

- 성과공유제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 25. 개정)

제8조(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 (생략)

08 단속 · 조사

- 업무유형 : 단속
- 평가대상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소관부처 : 경찰청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10. (생략)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이동 중에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자동차등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거나 휴대하는 화상표시장치(방송 또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또는 영상물(지리안내 및 교통정보를 제외한다)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의2.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이동 중에는 화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지리안내 및 교통정보를 포함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예측가능성

현황

- 최근 IT기술 발달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운전자의 운전 중 주위분산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 높아짐

※ 경북 의성에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 발생('12. 5. 1. 한국일보)

- 개정안은 현행법상 '운전 중 DMB 시청금지' 의무를 강화해 자동차가 이동 중인 경우 DMB를 포함한 화상표시장치 영상물 표시·시청(지리안내 및 교통정보 제외), 조작 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 ※ 화상표시장치 : 내비게이션 · 휴대전화 · PMP · 노트북 · 태블릿PC 등
- ※ 처벌규정(안 제156조제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문 제 점

- 개정안은 **화상표시장치 영상물 표시, 시청, 조작 행위에 대한 금지시기를** 현행법상 ‘운전 중’에서 ‘이동 중’으로 변경
 - 신호대기나 정차 상태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이 움직이는 경우를 규제하려는 것이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란 초래
- ※ 「도로교통법」 : ‘주차’, ‘정차’, ‘운전’, ‘서행’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으나 ‘이동’에 대한 정의는 없음
- 또한, 운전자의 주의 분산을 유발하는 **영상화면 표시금지 위치** 관련 조문을 신설하면서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규정
 - 조수석에서의 영상 표시행위도 금지하려는 것이나 일반인이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기 곤란
 - 위반행위시 범칙금 등 불이익처분이 부과되는 사항으로 단속범위에 대해 법률에서 일정한 기준 설정 필요
- 결과적으로, **위반행위 단속 과정**에서 적발대상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면하기 위한 로비 등 부패발생 소지

개선권고

- 현행법상의 ‘운전 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신호대기 등 정지 상태를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
-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 표시가 금지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도로교통법(2013. 5. 현재 개정진행 중)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신호대기 등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운전석 및 그 옆 좌석 등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는 위치에서 화상표시장치(자동차등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거나 휴대하여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지리안내 또는 교통정보를 제외한 영상물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의2.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화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 업무유형 : 조사
- 평가대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수산물식품부

제34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를 제외한다) 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수산물·그 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한한다)의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조사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항목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법 제31조에 따르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가능
- ※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법 제31조)에 관한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

- 부령 제34조 제1항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의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사후관리 조사방법과 조사사항을 규정
 - 조사방법
 -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 조사사항 : 잔류물질 검정조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 부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사후관리 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조사 항목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

문 제 점

- 개정안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방법과 조사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방법 중 **정기조사와 특별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조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우려 및 조사기관에서 제외되려는 기관의 불법 로비 등 부패 발생 우려

개선권고

- 정기조사 기관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5. 현재 개정진행 중)

제34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 ②(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의 선정기준, 세부적인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항목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09 보수

- 업무유형 : 수당
- 평가대상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법무부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당해 시험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 황

- 개정안은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등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할 필기 및 면접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함
 -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별 2명 이상,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 임명·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문 제 점

- 시험위원은 해당 시험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 관련실무에 밝은 자를 임명·위촉하므로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임명될 수도 있음
- 이 경우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시험위원 업무도 본연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개정안 제9조제2항은 시험위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신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공무원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참고 : 위원수당 관련규정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일반규정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각 중앙관서에게 통보하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참석비는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이때의 소관사무란 담당업무 뿐 아니라 소속관서의 사무를 포함함

개선권고

- 시험위원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위원은 수당지급대상에 제외함

개선결과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2012. 8. 3. 전부개정)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시험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해당조항 3호 삭제)

- 업무유형 : 수당
- 평가대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26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부터 3월 이전에 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현 황

-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판매원에게 사전에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 ·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 같은 조 제2항으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새로운 지급기준 적용일로부터 3월 이전에 미리 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시행령 단서규정에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이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문 제 점

- 시행령 단서규정의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에 대한 판단주체가 판매원이 아닌 판매업자에게 맡겨져 있고,

- 복잡하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실제 대부분의 변경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판매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07. 8. 위원회 실태조사)

• 또한 “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요건이 판매원 전부의 동의인지 또는 일부만의 동의로도 가능한지 그 구체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판매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단서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재량의 구체화·객관화 필요

개선권고

•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의 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예시) 2/3이상, 전원 등]

개선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전부개정)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제 3 절

자주 지적된 개선 사례

1. 과태료 부과기준
2.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
3. 취소처분 부과기준
4.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2012년 부패영향평가결과 자주 지적되었던 개선사례로는,

① 과태료 관련 규정 개선

- 과태료 부과처분 시 위반 횟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 명확화
- 과태료 가중·감경 규정 구체화
- 과태료 차등부과규정 마련

② 행정처분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 명확화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등을 받은 경우에 있어 당연취소규정 마련

④ 위원회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제척·기피·회피 등)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개선사례는 2012년 이전에도 빈번하게 개선의견으로 통보되었으며, 2012년에는 192개의 법령안에서 68건을 도출하여 소관부처에 통보하였다.



01 과태료 부과기준

- 평가대상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호	20만원
2.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44조 제3항제2호	20만원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3호	20만원
4.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100만원
5.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2호	100만원
5.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2	100만원

6.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3호	50만원
7.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44조 제3항제4호	40만원 3만원 1만원
8.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44조 제3항제5호	3만원 1만원
9.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4호	100만원
10.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가.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 나.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4호·제5호·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제12호·제13호 및 제20호 다. 제10조의2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9호 라.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	법 제44조 제2항제5호	100만원 30만원 5만원 3만원

호,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1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6호	
가.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1만원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2.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7호	50만원
13.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8호	50만원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6호	100만원
15.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호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0만원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 제10호	40만원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7.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1호	
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만원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6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8.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	법 제44조	5만원
워 둔 경우	제3항제12호	
1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	법 제44조	
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1항	300만원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비 고〉

- 이 표 제2호나목2)·제7호나목2)·제8호나목·제11호나목·제15호나목2)·제16호나목2) 및 제17호나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의 경우: 20만원
나. 제7호나목2)·제8호나목·제15호나목2) 및 제16호나목2)의 경우: 40만원
다. 제11호나목의 경우: 30만원
라. 제17호나목2)의 경우: 10만원
- 이 표 제2호 및 제11호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동일한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산정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 금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부과할 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개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때에는 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가중 또는 감경하며, 가중하는 때에도 위반행위별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건설기계소유자·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미보고 및 거짓보고,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

- ※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문 제 점

-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부과권자가 상한(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액을 자의적으로 정할 우려
 - 처분 대상자의 과태료 감경을 위한 로비 등 부패 발생 소지
-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반복적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일이 과태료 부과처분한 날인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인지 불명확하여, 전자로 해석할 경우 행정처분을 늦추기 위한 로비 소지
- 위반횟수에 상응하는 과태료 금액의 차등적용 기준이 없어 제재의 적정성 확보가 곤란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의 실효성 약화 우려

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시 감경 또는 가중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재량규정 명확화
 - ※ 예) 감경사유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거나 가중사유를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 위반 횟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 명확화
 - 1차 위반 시 기준일은 ‘과태료 부과처분한 날’, 2차 이상 위반 시 기준일은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규정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되, 일정금액(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세부금액을 규정



개선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13. 2. 20. 개정)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호	20만원	20만원	2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2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 인 경우		2만원	2만원	2만원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3호	20만원	20만원	20만원
라.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	법 제44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착 · 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 은 경우				
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 하여 등록번호표를 부 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 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2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 하여 등록번호표를 가 리거나 훼손하여 알아 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 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3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아.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 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 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4호			
1)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2) 변경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가) 신고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 인 경우		3만원	3만원	3만원
나) 30일을 초과한 경 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자.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 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5호			
1) 반납기간 만료일부		3만원	3만원	3만원

10일 이내인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차.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번호의 새김명령을 위 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4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건설기계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5호			
1)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 · 운행기 록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제10조의2제1항제5호 · 제6호, 제10조의2제2항 제1호 · 제4호 · 제5호, 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 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 까지, 제12호 · 제13호 및 제20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3) 제10조의2제2항제10호 · 제1호 및 제9호		5만원	5만원	5만원
4)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		3만원	3만원	3만원

호·제3호·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6호			
1)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2만원	2만원
2)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파.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7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하.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8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6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너.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3만원	3만원	3만원

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		3만원	3만원	3만원
인 경우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러. 법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7호			
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여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다)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발급 및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만원	30만원	30만원
3) 법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4) 건설기계폐기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저장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5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머.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1만원	1만원
나)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1만원	1만원
버. 법 제33조제2항을 위	법	5만원	5만원	5만원



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44조제3항제12호 법 제44조제1항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	-------	-------	-------

비고

- 제2호나목2)나), 아목2)나), 자목2), 타목2), 너목2)나), 더목2)나) 및 머목2)나)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나)의 경우: 20만원
나. 제2호아목2)나), 자목2), 타목2) 및 너목2)나)의 경우: 40만원
다. 제2호더목2)나)의 경우: 30만원
라. 제2호머목2)나)의 경우: 10만원
- 제2호나목 및 타목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같은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 **평가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별표1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개정안은 동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동일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금액 가중 부과
-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 규정

문 제 점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을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 － 위반행위를 적발하고도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일을 늦춰 과태료 가중부과 처분을 피하기 위한 로비 등 발생 가능성



- 또한,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처분통지서 도달일’을 의미하는지 ‘부과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법의 집행이 달라질 우려

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 시 같은 위반행위의 산정기준 명확화
 -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개선
 -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를 ‘부과처분을 한 날’로 개선

개선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3. 1. 31. 개정)

[별표15]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02 위반행위 횟수 산정기준

- **평가대상**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별표 5〉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9조의2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 2) (생략)

2. 개별기준 (생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양성과 자질향상을 통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운영



-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 체육지도자는 국공립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 스포츠 의학센터(운동처방) 등에 종사
- 동 자격증제도 운영과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
- ※ **가중처분의 위반행위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규정

문 제 점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일**을 최초의 행정처분 이후,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로 규정
 -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늦어질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이 곤란
 - 위반행위자가 가중처분을 피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늦추기 위한 로비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 **행정처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연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다수 법령에서 처분기준일을 ‘적발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개선권고

- 행정처분이 가중 부과되는 ‘같은 위반행위’의 산정기준일을 명확히 규정
 -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토록 함

개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2012. 8. 29. 개정)

[별표 5]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 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생략)



- 평가대상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훈련정지일 때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훈련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훈련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훈련정지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말한다)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여 줄 수 있다.

2. 개별기준 (생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 지정 취소, 1년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최근 1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 부과하도록 규정

문 제 점

-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1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를 행한 날,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행정처분을 행한 날 등 기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행정처분의 어려움 발생

– 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 행정처분의 가중을 피하기 위한 로비 등 부패발생 우려

※ 같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서도 가중처분의 기간 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행정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권고

-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대한 기간 산정기준을 행정처분을 한 날,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2. 6. 5. 개정)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훈련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훈련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초로 행정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말한다)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생 략)

03 취소처분 부과기준

- 평가대상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협력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산업표준의 제정·개정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

– 지식경제부장관은 협력기관이 i)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ii)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iii)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 취소요건에 대하여 모두 임의취소로 규정



문 제 점

-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형평에도 맞지 않음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에는 당연취소 사유로 하여야 함에도,
 -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다른 지정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임의적 취소로 하고 있어 법령 담당자 등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취소대상 기관에 의한 로비 등 부패행위 발생 가능
 - 또한,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록 등을 받은 경우 필요적 취소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 시 형평에도 맞지 않음

개선권고

-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당연취소토록 할 것

개선결과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3. 1. 9. 개정)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 **평가대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무총리실**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 허위,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사유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공신력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⑤ 생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은 대규모 온실가스배출업체(이하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목표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환경부는 ‘검증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검증
 - 검증기관은 환경부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신청에 의해 환경부가 지정·고시

〈 관리업체 등 현황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관리업체 수(' 12년)	검증기관 수(' 12년)	' 11년 검증수수료
490개	24개	약 60억원

문 제 점

-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이행실적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하므로 검증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 허위 또는 고의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임의적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검증 결과를 얻기 위한 관리업체와 검증기관의 유착 우려

개선권고

- 검증기관이 허위·고의로 검증결과의 정확성을 해친 경우 지정취소를 의무화 하도록 명시

개선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12. 12. 27. 개정)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제3호의

경우에는 고의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검증결과의 중대한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③ ~ ⑤ 생략

04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 평가대상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사안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제척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사안에만 한정하여 그 심사·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 사망·질병·부상·이주·전출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에 의한다.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 상위 법률('12. 2. 22.)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정·투명한 공유토지 분할을 위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구성(제10조)·기능(제11조)**과 위원의 선임·해임·제척, 위원회의 조직·운영·회의는 **시행령 제정토록 신설**

※ 공유토지 :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 사업계획 승인된 주택, 부대·복리시설의 토지,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위원장(판사) 및 부위원장(지적소관청 지명) 각 1명을 포함 9명 구성〉

-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 1명,
- 해당 구역의 읍장·면장 또는 동장
-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명
- 법률에 소양이 있는 해당 지역주민 2명

〈위원회의 기능〉

- 공유토지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분할 가격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정 등

문 제 점

- 제정안은 해당 심사의 토지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 등에 한해 제척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가 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기피,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는 규정이 없고
- 또한, 민간 위원(변호사 등, 지역주민)이 사망, 질병, 이주 등으로 직무수행을 못하는 경우만 해촉하고 이해관계 등으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촉하는 규정 누락
-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이 공유토지 분할 개시, 기각·취소 결정, 이의신청 등을 심사의결시 관련 재산권을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학연, 지연, 혈연 등을 통해 부패행위를 할 개연성 내재

개선권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이해관계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기피 신청과 위원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는 규정 명시
-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의 구체적 명시



개선결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2. 5. 22. 제정)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에 위촉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에 위촉을 해제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 및 지적소관청은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사안에 한정하여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산림청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

현 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0호, 2011. 7.25. 공포, 2012. 7.26.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교육심의위원회가 신설
 - －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법 제6조)
 -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법 제6조)

문 제 점

- 위원회 위원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서 관련 단체나 기관 등과 학연, 혈연, 근무관계 등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가 곤란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미흡

개선권고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산림교육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예 : 제척·회피·기피제도) 명시
 - 해당 안건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개선결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24. 제정)

제6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